



제337회 임시회

2015.01.28.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5년 01월 19일

○ 회부일자: 2015년 01월 20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 등을 정비하고, 도교육청 교육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정비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한 내용 삭제(안 제22조제7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변경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준용’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안 제28조)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 확대

- 1)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
→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36조)

마.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신설

- 1)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부과 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안 제61조제3항)

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안 제62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도교육청의 교육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한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안 제22조제7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준용’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안 제28조)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기존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감액 조정하고(안 제36조)
-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변상금 부과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안 제61조제3항)
-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교육청’ 을 ‘교육 지원청’ 으로 바르게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일부개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둔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13.12.27.][충청북도조례 제3624호, 2013.12.27., 일부개정]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 2012.12.31.] [법률 제11535호, 2012.12.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7.8.][대통령령 제25441호, 2014.7.7.,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 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4. (생략)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 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